

구정질문요지서(서면)

□ 질문의원 : 정장훈 의원

1.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확대 방안 마련<장애인복지과>

○ 관내에는 장애인거주시설, 지역사회재활시설, 직업재활시설 이외에도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여러 유형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위치해 있음.

○ 장애인거주시설·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이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을 보조받는 반면,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지자체 기준에 의한 운영비를 보조받거나 보조금 지원이 되는 사업을 매칭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.

○ 2024년 강서구 예산서의 「장애인단체 운영 지원」, 「장애인자립생활센터」 운영비 지원 항목을 살펴보더라도 1개 센터에 보조되는 운영비는 연간 6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수준임.

○ 장애유형·연령·서비스 내용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각각 다르므로 여러 유형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바라는 바임.

○ 적극행정 유형 실천사례

- 최근 3년(2021년 1월 1일 ~ 2024년 3월 31일)

2. 장애인 재난·안전 대응대책 마련<장애인복지과>

○지난 4월초 인천의 한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대 지적장애인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.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아파트 1층이었음에도 가족이 사전투표를 위해 잠시 집을 비웠던 사이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.

○장애인의 재난·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.

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, 비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2.2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망자의 경우 비장애인의 9배라고 함.

○2024년 기준 국/시비 지원을 받는 ‘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’의 경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160명, ‘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’의 경우 최중증 독거장애인 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. 이는 관내 등록 장애인 28,662명(2023.6월 기준)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됨.

○장애인의 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적·구조적 대책 이외에도 지속적·반복적인 교육과 장애유형별 정보격차에 따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임. 또한 화재와 같은 사고뿐 아니라 사회재난, 자연재난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○올해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강서구에 ‘마곡안전체험관’이 개관하였고, 다양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.

○이에 장애인 재난·안전 대응대책 마련에 대한 강서구의 향후 계획과 장애인의 마곡안전 체험관 연계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